폐공장서 '부산 대개조'… 침체도시에 스마트시티 비전

文 대통령, 부산 대개조 비전선포식

"최첨단·낙후 공존… 불균형 초래 대개조 계획서 배포·절박함 느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서 부산의 활기찬 미래와 발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경제의 활력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사상구 인근 폐공장에서 열린 '부산대개조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했고, 이번 비전선포식은 '도시침체'를 겪는 부산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비전선포식 때 "부산 경제의 활력을 체감하기 어렵다. 지역경제 침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과 공항, 철도를 두루 갖춘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동북아 물류 거점 도시다. 한국전쟁 시기 땐 우리나라 임시수도 역할을 했고,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킨 수준 높은 정치 도시다. 이런 부산을 '대개조한다'는 (부산시의) 계획에서 크나큰 배포와 절박함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다만 부산은) 오늘에 이르러서 세계적인 최첨단 도시와 낙후된 구(舊)주택가 등이 공존하는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다. 이제 지역 내 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려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때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부산시의 '부산 대개조' 비전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른바 '우리나라 관문'인 부산의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음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작년 말 정부는 지난달 부산신항-김해 연결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사상구-해운대구 연결 지하 고속도로를 민자 적격성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부산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부산을 선정했다. 오늘 부산에서 전략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오는 2021년 말이면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먼저 스마트시티의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도시침체 극복 대안으로 '연결-혁신-균형발전' 3개 방향의 부산대개조 비전을 비전선포식 때 제시했다.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대개조는 부산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성장의 모멘텀을 다시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그 비전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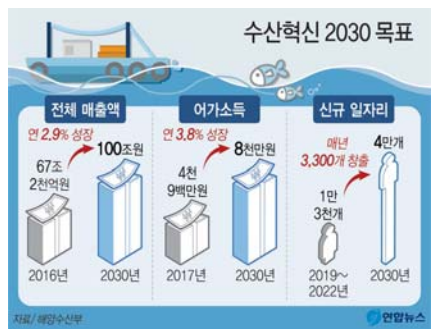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비전선포식을 사상구 내 폐공장에서 진행한 이유와 관련 "폐공장인 대호 PNC는 5년 전까지 약 1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폐공장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계기는 도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대개조를 상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비전선포식 참석에 앞서 지역경제인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인들과 전통 제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및 조선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오린태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정용환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 이사장, 이상준 부산벤처기업협회 대표, 박헌영 부산 상인연합회장, 문정호 전포카페거리 상인회장 등이 오찬에 참석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수산매출 100조·신규 일자리 4만개

정부, 수산혁신 2030 계획 확정

생산지원→자원관리 구조개편 "어가소득 8천만원으로 올릴 것"



정부가 우리 어업구조를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고, 연근해자원량 503만톤을 회복해 수산매출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을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식어업 부문에서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은 '어촌뉴딜 30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소규모 항·포구 70개소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수면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수산기업 부문은 창업과 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소비와 관련해 종전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2019년을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웅기자 grandtrust@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상무관 회의'에서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외공관 상무관 36명 수출 활성화 논의

산업부, 2019 상무관 회의

세계 주요국의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상무관들이 한국에 모여 올해 수출 활성화와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상무관은 재외공관에서 통상, 산업, 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어려움 해소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시장 동향 파악 등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0개국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36명의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상무관들은 미중 무역분쟁, 자동차와 철강 232조 조치, 각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브렉시트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업의 가치사슬이 기존 글로벌 단위에서 권역별로 재편되고 있다"며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연계해 이를 경제 도약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무관들은 주재국별 수출 기회와 위험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수출 전략도 발표했다. 상무관들은 신남방정책을 비롯한 신시장 개척, 한·유럽연합(EU) 협력,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별 수출·교역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15일에는 코트라(KOTRA)와 함께 신남방, 신북방 지역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에 진출전략과 수출 어려움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남북협력기금 투명화' 일부개정안 발의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명

남북관계가 호전하면서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운용 투명화에 나서고 있다. 기금 투명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명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할 경우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계획을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사 결과, 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기금운용 투명화를 위한 개정안은 처음 나왔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1990년 8월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한 대북 관련 정책자금이다. 주관부처는 통일부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국민성금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한다.

지난해 정부는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조977억원 규모로 설정했다. 이 중 비공개 예산은 약 5300억원 정도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비공개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당시 사업기금 투명화와 예산 삭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또 앞서 같은 해 10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대회 행사에 참석한 정부와 노무현재단이 남북협력기금 2억8000만원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농식품부, 감자값 폭등 사전예방 돌입

정부가 감자 가격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수급관리 체계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가격 폭등으로 이슈가 됐던 감자의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감자 수급조절시스템 구축방안'을 13일 마련·발표했다.

감자는 2017년 기준 자급률 99.4%를 기록하는 등 자급률이 높은 품목이지만 연이은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지난해 도매가격이 최고 13만원/20㎏까지 상승해 농가와 소비자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유통단계 조직화 및 인프라 확충, 비축제도 운영, 민간 보유물량 활용 제도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관측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지 조직화를 위해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대상을 현행 고랭지감자 위주에서 올해부터는 노지봄감자, 가을감자, 시설감자 등으로 전면 확대해 작기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웅 기자